

공동교섭단체 협상 막판 기싸움

정의당 원내대표·당명 양보 요구에 평화당 난색

상임위원장·간사 선정도 쟁점...최종 무산 가능성도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의 공동교섭단체 구성 협상이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최대 쟁점인 조대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명칭 결정 문제를 놓고 양당이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정의당은 당원 승인을 명분으로 첫 교섭단체 원내대표를 자당 노화찬 원내대표가 맡고, 교섭단체 이름도 '정의와 평화의 의원 모임'으로 '정의'를 앞에 두자고 주장하고 있으나, 의석수가 14석으로 정의당(6석)보다 많은 평화당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다. 정의당 관계자는 26일 "첫 원내대표를 우리가 먼저 하고, 당명도 '정의'를 앞에 놓지 않으면 전국위원회에서 당원들의 승인을 얻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소하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이번 (공동교섭단체) 논의는 평화당이 먼저 제안한 것"이라며 "우리가 어렵게 결정한 만큼 첫 원내대표는 정의당이 먼저 하는 것이 맞지 않거나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평화당은 국회의 관례와 상식을 내세워 의석이 많은 평화당 입장이 더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평화당 관계자는 "원내대표를 누가 먼저 하고 얼마 만에 교체할지는 국회의 관례나 상식에 따라 조정할 문제"라며 "의석수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정의당에 원내대표도 주고 이름도 양보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은 협의안"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애초 오는 27일이나 28일 전국 위를 소집해 협상 결과를 인준 받고 이번 주 중반에 평화당과 최종 협의를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핵심 쟁점을 둘러싼 양당의 이견 노출로 향후 일정도 다소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

조대 원내대표와 교섭단체 명칭 문제가 일단락되더라도 상임위원장이거나 간사, 각 당 정책위원 선정 등이 추가 쟁점으로 부상할 수도 있다.

양당 협상에 관여한 한 당직자는 "아직 교섭단체 성사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막판 협상 추이에 따라 무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더욱이 양당이 개헌의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도 불협화음을 낼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협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여야 3당 정부 개헌안 논의 정세균 국회의장(오른쪽)과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자유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 정례회에서 정부개헌안을 비롯한 현안을 논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 '당원명부 유출' 난타전

양향자 등 5명 이용섭 비난 릴레이 성명...靑계시판 수사 청원도 등장

더불어민주당 당원 명부 유출 의혹과 관련, 광주시장 민주당 경선 후보들이 연일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광주시장 경선 후보들이 기자회견, 논평과 성명으로 난타전을 이어가고 있어 "차라리 당원 명부 유출에 따른 경찰 수사가 빨리 결론이 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 25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 당원명부 불법 유출 사건 신속히 수사해 주십시오'라는 글이 게재돼 청원이 진행되는 등 갈수록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다.

26일 양향자 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이용섭 후보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전남 강기정·민형배·윤장현·최영호 예비후보 등 4명의 합동 기자회견에 이어 이틀째 이들 후보들은 당원 명부 유출 의

혹을 사고 있는 이용섭 후보에 대한 맹공을 퍼붓고 있다.

양 후보는 "광주는 이번에도 또 혼탁하다고 하고 민심이 등을 돌릴까 걱정되고 참담하며 이용섭 후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경선이 파행으로 가고 있는 것은 이미 반칙을 한 이용섭 후보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여론답게 당당하게 설명하고 잘못에 대해 책임지려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이런 상황이 된 데에는 당의 책임도 크다. 중앙당과 광주시당이 공정하고 신속하게 사건의 전모를 낱알이 밝혀 광주시장 경선의 혼탁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강기정·민형배·윤장현·최영호 예비후보 등이 합동으로 성명을 내 "당원명부 유출 사건의 책임을 지고 이

용섭 후보가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오는 27일 상경해 다시 자신들의 주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내 광주시장 후보 7명 중 이병훈 예비후보만이 "경찰 수사를 지켜본 뒤 당에서 결정하면 될 일"이라며 한 발짝 물러나 있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이용섭 후보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일부 언론에서 진행한 공개토론회에도 참석하지 않아 더욱 갈등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용섭 후보 측은 26일 이용섭 후보 명의가 아닌, 대변인 이름을 내건 논평을 통해 "허위사실과 비방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며 "강기정·민형배·윤장현·최영호 예비후보 등 4명이 발표한 성명서는 허위사실과 비방으로 이용섭 후보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광록기자 kroh@

6·13 선거 현장

광주시장 후보

이병훈, 광주 발전 9개 분야 90개 공약 발표



이병훈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광주 발전을 위한 '굿모닝 광주'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일자리가 넘쳐나는 스마트 경제도시, 삶이 매력적인 문화도시, 삶이 편안한 생태·안전도시, 더불어 함께 사는 복지도시, 시민이 주인인 참여도시를 목표로 9개 분야 90개의 공약과 함께 5대 전략거점을 집중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9개 실천전략은 좋은 일자리 만들기 대장정, 4차 산업혁명 강소기업·신산업 육성, 창조 메이커의 도시 만들기, 아시아문화중심도시사업 정상 추진 등을 꼽았다.

강기정 "미세먼지 분석 '안전과학원' 운영"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는 26일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미세먼지 프리존'을 지정하고, 미세먼지 영향예보 및 취약계층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미세먼지 안전 과학원을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강 후보는 "미세먼지 민감계층 이용시설인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노인요양시설 등에 고성능 공기정화장비를 구비하고, 통학버스로 주로 활용되는 경유차 셔틀버스를 LPG(액화석유가스), CNG(압축천연가스), 전기차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실시간 도시지역 미세먼지를 종합 분석하는 미세먼지 안전과학원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영호 기자회견 "시민 결정시대 열겠다"



최영호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예비후보가 26일 광주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적폐를 청산하고 시민결정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

최 후보는 "그동안 시민의 삶에 직결되는 시정 핵심 현안들이 제때 결정되거나 추진되지 못한 것은 독단적 시정과 소극적 공직문화 때문"이라며 "공직문화를 새로운 시대 요구에 맞춰 환골탈태하도록 해 진정한 시민봉사로 바뀌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공직사회 출세 우기 등 적폐를 청산하고 측근·인척 비리나 공직자 부정부패가 다시는 발붙일 수 없도록 일벌백계 원칙을 세우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가 우대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의원 재선거 후보

김명진, 골목길 경쟁투어 '시민 속으로'



김명진 민주평화당 광주 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6일 골목길 경쟁투어를 통해 '말들어 주는 김명진-시민 속으로' 행보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하루 1000명 유권자와 약속하기 ▲10명 이상 모이는 행사는 빠짐없이 참석하기 ▲명함 받은 분에게 당일 인사 전화하기 등의 원칙을 정하고 총원무진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지난 15일 예비후보 등록 후 인력대기소 새벽 인사로 하루를 시작, 자정까지 서구 골목골목 상가를 방문하고 각종 행사와 모임을 찾아다니며 골목경쟁투어를 계속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발로 뛰어 성실하게 다가오는 모습에 우호적인 반응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송갑석 "한국당 대통령개헌안 국론 분열 야기"



송갑석 광주서구갑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6일 문재인 대통령 개헌안 발의에 대해 "국민의 소통을 위해 설명한 것을 발의라고 주장하며 현 정부와 진흙탕 싸움을 벌이려는 것은 신뢰 잃은 제 1야당의 발악으로 보일 뿐이다"고 주장했다.

송 후보는 "지난 22일 이미 개헌안 브리핑을 통해 이는 대통령의 개헌안이라고 밝혔으며 정식 발의 전에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었다"고 설명한 뒤 "당연히 합헌인 것을 자유한국당측이 국민에게 혼돈을 야기하는 용어 사용으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재욱 "해상안전에 예산 증액·법률 정비"



백재욱 더불어민주당 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재선거 예비후보는 26일 흑산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여객선 '핑크돌핀호' 최중 사고와 관련해 긴급보도자료를 내고 "해난사고에 대한 긴급구조와 이송체계 및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정책에 역점을 쏟겠다"고 발표했다.

백 후보는 "이번 사고가 짙은 해무가 깔린 상태에서 발생한 것에 대해 해상운송의 지도, 단속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해상해난사고의 구조, 이송, 긴급의료체계를 보다 체계적으로 정비하는데 예산 증액을 포함한 법률적 정비에 힘쓸 것"이라고 약속했다. /박정욱·오광록 기자 jwpark@kwangju.co.kr

민주당, 장만채 전 전남교육감 입당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전남지사 출마를 선언한 장만채 전 전남 교육감의 입당 문제를 논의했으나 보류 결정을 내렸다.

박법계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심도 있게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면서 "입당 문제는 일단 보류됐다"고 밝혔다.

앞서 당 당원자격을 심사하는 전남 회의에서 장 전 교육감의 입당을 승인했다. 그러나 이날 최고위 회의에서는 안규백 최고위원 등이 장 전 교육감 입당에 부정적 의견을 표시함에 따라 추후 더 논의하기로 했다. 당 입각에서는 장 전 교육감이 지난 5·9 대선 때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를 지원했다며 정체성 문제가 제기된 상태다.

한편, 이날 최고위는 목포시장 선거에 출마한 배용태 전 전남도부지사에 대한 복당을 승인했다. 또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 회의 도중 당무위를 열고 시·도지사 선거에 출마하려면 선거 120일 전에 지역위원장을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광역단체장 후보공모에 참여하지 못한 김영록 전 장관을 구제하기로 했다. 또 6월 지방선거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앞으로는 당무위원회의가 아닌 최고위 회의에서 '지역위원장 120일 사퇴 규정' 예외 인정 문제를 판단하기로 했다. 이는 전남지사 출마 가능성이 있는 김경수 의원 등을 염두에 두고 당무위 권한을 최고위로 넘긴 것으로 분석된다. /박지경기자 jkpark@

더불어 사는 삶을 위하여-

부동산 투자!
오천경매와 함께 하면 성공합니다!

(주)오천경매 최 선 규 H.P 010-3605-5000